

운전 면허 취소자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공단에 교통 참여교육 등을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고 가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사 1층 대강의실에서 범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44명을 대상으로 참여법규 및 참여사고 교육을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교육에 참가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며 임시면허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와 공단 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을 보러 갔다.

무면허 운전자인 일부 교육생들이 공단 안에 자신의 차를 주차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단 측은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

소양교육 가는 길 차몰고 배짱 '무면허운전' 도로교통공단은 "단속권 없다"며 방관만

진행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교육(음주운전·교통사고 야기·벌점초과 포함)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1만8000명이다. 지난해엔 2만714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생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40점)이 초과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다. 이들 중에는 면허정지로 임시면허증(최장 40일)을 발급받은 이들도 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자들이다.

이들 중 면허정지자는 정지일수를 감경(최장 50일)받기 위해,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공단을 찾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공단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차를 버젓이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법규교육에 참가한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차를 몰고 왔으며 공단

관하고 있다.

다만 교육시간 중 교육생들에게 "차를 몰고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는 구두경고를 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공단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으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면허취소교육자 공단을 찾은 C씨는 "나 뿐만 아니라 차를 몰고 온 뒤 공단 내 주차장 또는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교육생들이 많았다"며 "당시 공단 측에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 교육시간에 '차를 몰고 오지 말라'고 유도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초등 학폭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 '全無'

지난해 148개교서 381건 발생률 전국 평균의 4배나 중·고 치우친 대책 개선을

전국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지만 전문상담교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148개교에서 38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학교당 평균 2.57건 조치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이어 세종이 1.27건(22개교 중 28건), 서울 1.19건

(1187개교 중 580건), 대구 1.11건(217개교 중 241건)이었다. 전국 평균은 0.60건으로, 학교폭력이 광주에서 4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남은 0.56건(425개교 중 238건)에 그쳤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위(Wee) 클래스 설치율도 20.1%로 전국 평균(26.5%)을 밑돌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425개 초등학교에서 238건의 학교폭력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개교, 위클래스 설치율은 30.5%였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중·고교에서는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비중은 중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국 중학교에서 조치한 학교폭력은 2011년 1만7699건에서 2012년 3만 5789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3만231건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도 2012년 1만 2139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9385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2011년 1020건에서 2012년 3156건, 2013년 35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중·고교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단종·낙태 한센인들 지리한 소송 끝날까 피해자 19명 손배소 항소심

수십년 넘게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강제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단종(斷種)과 낙태를 당해온 한센인들의 지리한 소송전이 이번엔 끝날 수 있을까.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7일 A(78)씨 등 한센인 피해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부장판사 유영근)의 1심 판결에 불복, 국가가 항소된 뒤 열린 첫 재판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한센인 피해자들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92세의 고령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가 한센인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 사과하고 일괄 배상법을 제정해 한센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낫다, '기계적 항소'로 시간을 끌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화의 서중희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한센인들의 사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정당한 배상을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위법해위가 아니다' 등의 쟁점을 심리,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국가가 국민으로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3000만~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



사회복지사 한마음 체육대회 17일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광주지역 사회복지사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피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여성 원룸 침입한 만취 대학생

○...술을 마시고 생면부자인 여성의 원룸에 들어간 20대 대학생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같은 날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A원룸 2층 복도에서 이모(여·30)씨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다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서 집인줄 알고 들어가려 한 것 같다. 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원룸 복도 2층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황실수술.

박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감사원, 해경 간부 해임 등 중징계 요구할 듯

'세월호' 최종 감사 내주께 발표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르면 내주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중간 결과발표 때 언급된 40여명에 대한 징계는 거의 그대로 이뤄질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을 아울러 징계 요구 수위는 가벼운 편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이들 40여명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내주 중으로 예상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현 서해지방청 경무기획과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 등에 대해서 해임 및 강등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놓고 교육부-교사 충돌

리본달기 등 중단 촉구 마찰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과 리본달기 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내에서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주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수업과 1인 시위, 점심 단식, 리본 달기 등의 실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수업은 전교조 본부에서 제작한 '세월호'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내 1인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점심 단식과 리본 달기도 소속 교사들의 참여의사를 파악해 실시할 방침이며 일부 교사들은 단식과 리본 달기에 이미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일부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과 1인시위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 긴 광주시교육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와는 다른 입장의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매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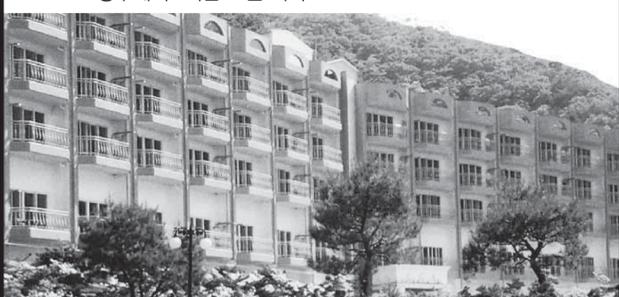
남/여 직원 모집

- 35세 이하, 차량소지자 우대
- 초봉 150만원부터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 / 별장 / 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 ★ 아파트 개념
-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 화개장터, 썬게사, 노고단 근접거리
- ★ 총 55세대 (18/28/56평) 중 1세대
- 28평 - 8400만원(운자 23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창가, 코너, 전망 좋음, 20층중 13층
-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최상층
-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